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안보적 영향

이상현(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1. 격화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 한국 사회는 또 다른 문제로 열병을 앓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싼 안보논쟁이 그것이다. 작금의 논란은 전시 작통권 환수가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긍정적 요인인가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 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자 군 원로들은 전시 작통권 환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윤광웅 국방부장은 ‘오래전에 군 생활이나 장관을 지낸 분들이 대체로 우리 군의 발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전시 작통권의 단독행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염려하거나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반박함으로써 논란은 가열되었다. 국방부장의 주장에 대해 전직 국방장관 17인은 성명서를 내고 전작권 조기환수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군 원로들이 국방현안에 대해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은 58년간의 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뒤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8월 9일 한 국내언론과의 회견에서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시기와 관련하여 ‘지금 환수되더라도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하여 논란에 불을 붙였다. 서울 용산과 광화문 등 도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대한 찬반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노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다시 한번 전시 작통권 환수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작전통제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요, 자주국방이야말로 주권국가의 꽃’이라고 언급하여 작통권 환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국 국민으로서 전시 작통권 환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우리의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 작통권 환수는 언젠가는 이뤄져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는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을 면밀히 헤아려 환수의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물론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력증강 계획 등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그것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전작권 조기 환수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작통권 환수가 실익은 적은 반면, 당장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찬성하는 쪽에서는 국가주권과 자주

성 회복의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운다. 두 입장 모두 한국의 국익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문제는 현재의 작통권 환수 논란이 합리적인 대안이나 안보 우려를 잠재우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시 작통권 환수는 한국의 안보는 물론 한미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 만큼 작통권 환수의 여건과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다. 이 글에서는 작통권 환수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주권'과 '자존심' 문제인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된 것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의 일이다. 이렇게 이양된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은 1954년 11월 17일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그 후 개정된 한미합의의사록에는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어,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된 이래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1994년 12월에는 한국군이 정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함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연합사령관이 자의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위임을 받아 양국 합참의장이 참여하는 한미군사위원회(MC)의 위임을 받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표현은 실상 잘못된 것이고 한국측 '단독 행사'라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주장하는 논거는 전쟁과 같이 국가존망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다른 나라의 손에 맡겨둘 수 없다는 당위성에서 비롯된다. 즉 전시에 주권국가로서 우리 군대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를 외국 지휘관이 행사한다는 것은 국가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지휘권(Command)과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의 차이를 호도한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 국민들 상당수는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시에 한국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거나, 한국에서 미군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한다는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다.

작전통제는 특정임무를 위해 변경된 지휘계통 하에서 해당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여된 것으로서 지휘권보다 매우 제한된 권한이다. 평상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지만 한·미 양국군의 방어준비태세(테프콘-DEFCON)가 평상시의 테프콘 IV에서 테프콘 III로 격상되면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가도록 돼 있다. 테프콘 III는 '중대하

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데프콘 격상도 한미연합사령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 양국 합참의장에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느 한쪽 국가의 대통령이라도 반대하면 데프콘 격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현재의 한미연합지휘체제는 나토의 작전통제구조와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아직도 한미연합작전체제가 한국에게 불평등한 구조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군사관계가 대등해지려면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완전히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토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지만, 거기서는 이 문제를 국가주권의 침해로 해석하지 않는다. 또한 전시 작통권은 말 그대로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한 그것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권한에 불과하다.

이런 면을 고려할 때 작전통제권은 주권이나 군 통수권과는 상관없는 지휘권에서 비롯되는 하위개념에 불과하다. 또한 작통권의 본질은 특정 군사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효율을 위한 협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언젠가부터 마치 전시작통권이 우리의 주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국가주권자의 군 통수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오해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굳어졌다. 이와 같이 전시 작통권 문제는 본질상 군사협력과 효율의 문제인데 그것이 외교안보 쟁점으로 변질되면서 우리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일각에서는 그에 편승하여 이를 반미감정 고양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3. 전시 작통권 환수의 안보적 영향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 볼 때 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한국이 독자적인 작통권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작통권 환수 후에도 전시 증원을 포함한 원활한 연합작전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작통권 환수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통권 환수가 초래할 결과를 예상해볼 필요가 있다.

국방부가 지난 8월 17일 국방위에 보고한 전시 작통권 환수 로드맵 초안에 의하면 신 한미동맹 군사구조는 '공동방위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공동방위체제는 한국군과 미군으로 구성된 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각 역할을 수행하는 독자사령부를 창설, 군사구조를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합동군사령부와 미국의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각 독자사령부 역할로 전환되면 한반도라는 한 지붕 아래 1개이던 사령부가 2개의 사령부로 분화

된다.

두 개의 사령부가 전시 및 유사시에 원활한 공동작전을 펴기 위해서는 상시 의견을 협의 조율하는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 이 같은 협의체가 마련되지 않으면 유사시 공동작전을 펴는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양측은 ‘전-평시 작전협조본부’(가칭 협조본부)를 뒤 긴밀한 군사작전 협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사실상 연합사를 대체할 협조본부에는 작전·전략·군수·기획 등 10여 개의 군사 핵심 분야에 대한 상설·비상설기구를 설치해 정보, 위기관리, 공동계획 작성, 연습 및 훈련, 전시 작전 수행 등을 협력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사구조 변환을 위한 한미 군사구조 이행추진단을 설치 운용기로 한 것도 로드맵의 핵심 내용이다. 이행추진단은 앞으로 동맹 군사구조 전환절차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특히 우리 군의 전력증강계획을 감안해 미 측의 지원요소를 식별하고 지원방법을 구체화하는 것도 이행추진단의 임무다. 한미는 한반도에서 효과적인 대북억제와 전쟁수행 능력이 지속되도록 보장하면서 결정한다는 내용도 로드맵에 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시 작통권 환수 후에도 정보·공군력 협력 체제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로드맵에 명시될 예정이다.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의 준비가 되었나

우선 한국이 전시 작통권을 환수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자.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윤 장관은 전작권 환수 반대론자들이 우리의 군사력을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비교대상은 북한이라고 못 박았다. 국방부 당국자도 국방중기계획이 마무리되는 2011년경에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 등 전 분야에서 전작권 단독행사의 기반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의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우리 군이 북한에 비해 재래식 전력면에서 우세하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역지력이 없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북한에 비해 재래식 전력과 전투지속능력에서 우세한 반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근거한 역지력에서 우세를 갖고 있어서 한반도의 군사균형이 이뤄져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한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에 비해 우세라고 말하는 것은 대량살상무기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적 고찰에 불과하다. 즉 싸워서 이기는 우위와 억제가 가능한 우위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세력경쟁이 강화되고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추세인데도, 우리가 북한에 비해

우세하다고 한미동맹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현명한 것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주장하듯이 남북한의 경쟁은 이미 남한 쪽으로 기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 군사력을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동북아에서 진행되는 암묵적인 패권 경쟁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동북아에서의 방위충분성 확보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에서 야기될지도 모를 분쟁상황에서 최소한 캐스팅 보트를 던질 수 있을 정도의 무게를 가져야 한다.

한·중·일 삼국의 군사력을 비교해볼 때 한국이 단연 열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이들을 상대로 양적인 면에서 군사력 경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며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양적인 면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견제능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다. 한국은 주변국들에 비해 양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더라도 질적인 면에서 상대방에게 치명적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의 방위충분성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다. 즉, 우리가 먼저 남을 공격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적이 우리를 공격할 경우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는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군대가 필요한 것이다. 작지만 유사시에는 치명적인 한방을 날릴 수 있는 국방력 건설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2012년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의 전제는 2011년에 마무리되는 국방중기계획의 성공적 완료이다. 여기서의 관건은 매년 9.9%씩 국방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국가예산은 하루아침에 대폭 증액이 어려운 것이고, 지금까지의 추세와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을 볼 때 그만한 국방예산 증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객관적 현실이다. 또한 국방력이란 단순히 장비를 갖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운용하는 능력 등 전반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2012년이 너무 빠른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전작권 환수 후 연합방위태세는 확고한가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군 원로들과의 모임에서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해도 주한미군 주둔은 보장되며 우리에게 부족한 조기경보 정보 지원문제는 절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 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과 지원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한미관계가 더욱 벌어질 경우에도 타당할까? 지금처럼 한국과 미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각기 제갈길로 가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미관계는 현재보다 더 냉각되면 되었지 좋아질리는 없다. 전작권 환수 후에도 미국의 전시증원이 가능하려면 양국이 동맹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공유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의 추세라면 그러한 신뢰는 보장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미군이 자국군을 타국 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둔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 기대 난망이다.

또한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 한·미 연합사령부를 대체할 기구로 소개한 가칭 ‘전·평시 군사협조본부(MCC)’의 유사시 효율성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MCC는 한국군 장성 1명과 미국군 장성 1명이 공동의장을 맡아 협의하는 체제로 운영되는데, 과연 이런 수평조직이 긴박한 전시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연합사 체제는 양국군이 제도적으로 연합작전을 하도록 묶어놓은 것으로, 양국이 좋은 싫든 의무적으로 합동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체제이다. 연합사 해체는 그런 의무적 합동작전이 아니라 이제는 양국이 협의하고, 지원과 참여의 수준도 각자 결정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그럴 경우 미래 어떤 사태가 발생할 당시의 한·미간 정치적 관계가 중요하다. 즉 한미관계가 아주 좋고, 서로 신뢰할 수 있다면 연합사 체제에 버금가는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한국과 미국이 특히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각기 제갈길로 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작통권 환수 후 지원 여부는 매우 불투명해진다는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연합사라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진 후, 협조는 말 그대로 협조일 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군사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간 이견이 생길 경우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지붕 밑에 두 살림을 차리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엮어 가는’ 이원화된 체제가 전시에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특히 현대전과 같은 속도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휘권이 단일화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미 합참 전쟁원칙(Principles of War) 가운데 하나가 단일지휘체계(Unity of Command)일 정도로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는 전쟁수행에서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국방부마저도 MCC에 대해 “연합사에 ‘버금가는’ 핵심기구”라고 표현함으로써 연합사 체제보다는 ‘접착력’이 못미친다는 점을 은연중에 시인하고 있다.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전작권을 우리측이 단독 행사하게 되면 우리 군의 자신감이 증대하고 자주국방이라는 취지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더불어 원하지 않는 동북아 갈등에 연루되는 위험도 피할 수 있고 북한과의 불필요한 긴장관계 조성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익에 비해 전작권 조기 환수가 한국 안보에 미칠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한미연합사 체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통합·신속·효율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휘기구로서 대북 억지력 면에서 갖는 상징성은 너무 크다. 한미연합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상당한 부담을 주면서 상당한 억지 역할을 하고 있다. 작통권 환수는 곧 한미연합사 해체를 의미하며,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의 상징성이 파괴되면서 연합방위체제는 실질적으로 끝나게 된다. 최악의 경우 북한의 오판으로 인해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실수이다. 더 나아가 연합사가 해체되면 전시증원을 전제로 수립된 각종 연합작전계획이 수정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우리가 통일과정에서 미국의 힘을 빌리고자 한다면 이는 결정적 오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미연합사와 비슷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일본의 경우와 대조적이다.

4. 결론

결론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인위적 시한을 설정하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전작권 단독행사는 한국군의 역량이 향상되어 여건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인데, 왜 부작용을 무릅쓰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강행하려 하는가? 전작권을 한국측이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면 한미연합사 존립의 근거가 없어지고, 미군의 전시증원을 전제로 수립된 각종 연합작계가 수정되어야 하며, 한국군의 감시·정찰장비 수준이 지금보다 최소한 2~3배가량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때문에 2010년 이전에 한국측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인데, 문제는 왜 이 시점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가 불거졌는가 하는 점이다. 더군다나 한미관계의 기본적 신뢰가 과거에 비해 약화된 상태에서 정치적 동기로 이 문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현명한 정책이 아니다.

둘째, 전작권 환수문제는 군사문제가 지나치게 외교쟁점으로 비화한 사안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통일부장관의 미국과의 외교마찰을 부를 가능성이 있는 발언들은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감정적으로는 할 말 다하면 시원하기는 하겠지만 국익을 책임진 사람들로서는 할 말과 못할 말을 가리는 혜안이 필요하다. 동맹 조정과정에서 이견과 불만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떠들기보다는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미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군의 군 태세를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군 변환을 추진 중이다. 일본과는 동맹을 강화하면서 동아시아-태평양전략도 변화를 모색하는 중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가운데서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한국이 앞장서 동맹의 역량을 제한하게 될지도 모를 전작권 환수나 자주국방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다. 어차피 한국이 동북아의 판세를 주도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면 주변의 변화를 잘 읽고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이 미일동맹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변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게 봐야 한다. 미군과 병렬형 지휘구조체제를 가진 일본은 한미연합사 수준은 아니더라도 현재 가동 중인 미일 공동작전소의 기능과 편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2008년경에 한미연합사와 비슷한 미일연합사를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한 움직임이 한국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겨볼 때이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든지,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강화하든지 두 개의 선택 외에는 없다. 한미동맹은 과거에 비해 점점 더 얇은(thin) 형태로 변하는 과정에 있다. 한

미동맹을 그런 방향으로 변화시켜 자주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안보자산 손실을 만회할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만일 그럴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한미동맹을 더 이상 약화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SCM)에서 전시작통권 환수를 위한 로드맵을 합의·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반세기를 지속해온 동맹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양국이 동맹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견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이견을 어떻게 조정하고 수렴해 나가는가 하는 점이다. 동맹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주요 현안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는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 한국정부는 장기적으로 무엇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현명하고 사려 깊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내용 문의 :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704 우)100-813 / 전화 (02)779-0711 / 팩스 (02)779-0718 / 메일 kifs@kifs.org